

미얀마 신정부 출범의 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김소은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차 례

1. 연구 배경
2. 선거 결과와 국제사회 반응
3. 쿠데타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와 신정부 출범의 경제적 함의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 미얀마 군정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총선을 통해 전체 의석의 76.1%를 장악하며 헌법 개정 가능 수준을 확보함.
 - 해당 총선은 1차(2025. 12. 28.), 2차(2026. 1. 11.), 3차(2026. 1. 25.)에 걸쳐 3단계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선출직에서 친군부 정당 USDP가 339석을, 군부는 자동 배정 의석 166석을 확보함.
 - 다만 이번 선거는 주요 야당 배제, 내전 지역 투표 제외, 대규모 무투표 당선 등 절차적 공정성과 대표성에서의 한계가 지적됨.
- ▶ 이번 선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서방의 제재 및 불인정 기조와 주변국·인접국의 실용주의적 관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 특징임.
 - 미국·EU 등 서방은 '사기 선거'로 규정하며 제재 기조를 유지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와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일부 회원국과 일본·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은 선거의 절차적 한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 관여를 병행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함.
- ▶ 신정부 출범은 대내적으로 민 아웅 흘라잉의 1인 지배 체제 공고화, 대외적으로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외교적 명분 확보, 경제적으로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제한적 반등이라는 복합적 함의를 가짐.
 - [대내] 군정은 국가자문위원회(UCC) 신설 등을 통해 명목상 민간정부 형태를 띠면서도 군부의 실권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구조를 법제화함.
 - [대외] 중국 등 주변국의 실용주의적 관여 확대로 미얀마의 외교적 고립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나, 서방 제재가 단기간 내 해제될 가능성은 낮음.
 - [경제] 재건 수요와 국경 무역 재개로 2026/27년 성장률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력난, 전력난, 물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저성장 고착화(L자형)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 ▶ 신정부 출범만으로 서방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이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한국은 즉각적 재관여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함.
 - ① 현지 민간 채널 보존, ② 재한 미얀마인 네트워크 관리, ③ 다자기구를 경유한 인도적 지원 지속, ④ 한-미얀마 양자투자보장협정(BIT) 등 제도적 프레임워크 유지에 주력하며 기존 협력 기반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1. 연구 배경

■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약 4년 만에 총선거를 시행한 결과, 친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함.

- 군정은 7차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선거를 지연해오다가 2025년 7월 말 비상사태를 해제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선거를 시행함.
- USDP는 선출직 의석의 78.7%를 차지하며 압승하였고, 헌법상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25%의 의석을 합산하면 군부 세력이 전체 의석의 76.1%를 장악하여 헌법 개정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함.

■ 이번 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으며, 서방 국가와 일부 아세안 회원국은 불인정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주요국은 실용적 접근을 보임.

- 본 선거는 주요 야당이 배제되고 내전 지역 다수가 투표에서 제외되는 등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가운데 아세안은 공식적으로 선거를 불인정하였으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선거 결과를 대화의 계기로 삼으려 하는 등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함.
- 미국과 EU 등 서방국은 선거를 불인정하며 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및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용적 관여를 병행하는 등 국가별 대응이 엇갈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대외관계 및 경제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전히 민간 부문 협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은 미얀마 정세 변화가 갖는 함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정은 2026년 4월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사령관을 대통령으로 하는 신정부 출범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급등, △외화 부족 등 경제 위기가 지속 중임.
- 한국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공적 경제협력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인도적 지원, 민간투자, 고용허가제(E-9) 등을 통한 인적 연계 등 실질적 관계는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정치 및 경제 안정화 여부는 한국기업의 사업 환경 및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본 원고는 미얀마 선거의 시행 배경 및 결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분석하고,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신정부 출범이 갖는 경제적 함의를 검토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선거 결과와 국제사회 반응

가. 선거 배경 및 주요 결과

- 미얀마 군정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7차례에 걸쳐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선거를 지연하다가 2025년 12월~2026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첫 총선거를 시행함.
 - 군부는 2021년 2월 1일에 아웅산 수찌(Daw Aung San Suu Kyi)가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2020년 총선 승리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감행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이후 군정부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비상사태를 총 7차례 연장하며 선거 시행을 반복적으로 연기했으며, 2025년 7월 31일 4년 5개월 만에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함.
 - 2008년 헌법은 비상사태를 최장 2년까지만 허용하나 군정은 '국가 안보상 필요'를 근거로 이를 지속 연장함.
 - 선거는 2025년 12월 28일에 1차 투표(102개 타운십), 2026년 1월 11일에 2차 투표(100개 타운십), 2026년 1월 25일에 3차 투표(61개 타운십)로 순차 시행됨.¹⁾
 - 다만 이번 선거는 전국 330개 타운십 중 263개에서만 투표를 실시되었으며, 카친독립군(KIA), 아라칸 군(AA) 등 반군이 장악한 카친(Kachin)주, 카렌(Kayin)주, 산(Shan)주 등 67개 타운십은 안보상의 이유로 투표에서 제외됨.

- 친군부 성향의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연방의회 선출직 의석의 78.7%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압승함.
 - 미얀마 연방의회는 하원 440석과 상원 224석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2008년 헌법에 따라 각 원의 25%는 군부에 자동 배정되고 나머지 75%만 선거를 통해 선출됨.
 -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의 공식 결과에 따르면, USDP는 하원 선출직 231석과 상원 선출직 108석을 확보하여 총 431석 중 339석을 차지함.²⁾
 - USDP는 1차 투표에서 102개 선거구 중 89석(87%), 2차 투표에서 86석을 획득하며 압도적 우세를 보임.
 - 산민족민주당(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몬통합당(Mon Unity Party), 파오민족기구(Pa-O National Organization) 등 나머지 소수 정당은 1~10석 사이의 미미한 의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침.³⁾

- 헌법상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25% 의석을 합산하면 군부 세력은 연방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여 헌법 개정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함.

1) US News & World Report(2026), "Military-Backed Party Leads in Early Election Results in Myanmar"(검색일: 2026. 2. 25.).

2) Xinhua(2026), "Myanmar's USDP wins majority of seats in Union Parliament"(검색일: 2026. 2. 19.).

3) *Ibid.*

- 2008년 헌법 규정에 따라 연방의회 전체 의석 수의 25%인 166석(하원 110석, 상원 56석)은 군부에 자동으로 배정됨.
- 이번 선거에서 USDP의 339석과 군부 배정 166석을 합산하면 총 505석으로 전체 664석의 76.1%를 친군부 성향이 차지함.⁴⁾
- 이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전체 의석 수의 75%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군부가 향후 헌법 개정을 포함한 주요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함.
- 군정은 2026년 3월 신규 연방의회를 소집하고 4월 중 새 정부를 출범할 계획이며,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이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군정 수장에서 민간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⁵⁾

표 1. 미얀마 2025~26년 상하원 총선 결과

(단위: 석, %)

구분	정당	하원(인민원)	상원(민족원)	총계	비중
선출직	USDP	231	108	339	51.1
	소수민족 정당	32	20	52	7.8
군부 배정(25%)		110	56	166	25.0
기타 및 공석		67	40	107	16.1
연방의회 전체		440	224	664	100.0

주: USDP를 제외한 모든 정당은 소수민족 정당으로 통합함.
자료: 주요 외신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선거의 구조적 한계와 평가

■ [선거 전] 군정은 정당 해산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거 이전부터 실질적 반대 세력을 체계적으로 배제함.

- 2020년 총선에서 83%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NLD는 2023년 1월에 제정된 '정당등록법'의 수감 중인 당원을 보유한 정당의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근거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강제 해산됨.⁶⁾
- NLD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부패, 선거법 위반, 국가기밀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총 27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NLD 주요 지도부 대다수가 체포 및 투옥되거나 망명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됨.
- 2025년 9월에는 국민민주전선(NDF) 등 4개 정당이 추가로 해산되는 등 군정은 선거 직전까지 잠재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지속함.

■ [선거 운영] 군정은 선거 운영 과정에서도 후보 자격 박탈, 언론 통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낮은 투표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4) Xinhua(2026), "Myanmar's USDP wins majority of seats in Union Parliament"(검색일: 2026. 2. 19.).

5) Al Jazeera(2026), "ASEAN does not recognise Myanmar's elections 'as of now', Philippine FM"(검색일: 2026. 2. 19.).

6) Human Rights Watch(HRW)(2023), "Myanmar Junta Dissolves Political Parties"(검색일: 2026. 2. 25.).

-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전 야당 후보 다수를 자격 미달로 일방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163개 선거구에서 USDP 후보만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태가 발생함.⁷⁾
- 선거 기간 전반에 걸쳐 언론 통제 및 집회, 표현의 자유 억압이 지속되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환경이라는 점이 인권 단체에서 지속 제기됨.⁸⁾
- 한편 공식 투표율은 52%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2015년과 2020년 총선의 약 70% 투표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독립적인 국제 선거 감시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표 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⁹⁾

다. 국제사회 반응

1) 아세안

■ 아세안은 미얀마 선거 인정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임.

- 2026년 1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직후, 의장국인 필리핀의 테레사 라자로(Theresa Lazaro) 외교장관은 “현재로서는(as of now) 아세안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함.¹⁰⁾
-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폭력 중단 및 포용적 대화 선행의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한 불인정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¹¹⁾
- 반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이번 선거 결과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자 대화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¹²⁾

■ 이러한 아세안 회원국 간의 이견은 ‘내정불간섭’ 원칙의 해석 차이와 회원국별 국내 정치·안보 상황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아세안의 전통적 외교 원칙인 ‘내정불간섭’은 회원국 정부 형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 2021년 쿠데타 당시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이 원칙의 적용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함.
- [강경 불인정]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국내에 민주화 여론과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미얀마 군부 인정 시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크며, 싱가포르를 법치와 국제 규범 준수를 외교 정체성으로 삼아 원칙적 입장을 취함.¹³⁾
- [조건부 불인정] 필리핀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통합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현재는 불인정한다는 유보적 표현을 사용함.¹⁴⁾

7) The Nation Thailand(2026), “USDP wins majority of seats in Phase Three of Myanmar's general election”(검색일: 2026. 2. 25.).

8) Athan(2025), “Update on Journalism and Media Safety in Myanmar: Jul-Sep 2025”(검색일: 2026. 2. 25.).

9) NPR(2026), “ASEAN won't endorse election in military-ruled Myanmar, Malaysia says”(검색일: 2026. 2. 19.).

10) Al Jazeera(2026), “ASEAN does not recognise Myanmar's elections 'as of now', Philippine FM”(검색일: 2026. 2. 19.).

11) NPR(2026), “ASEAN won't endorse election in military-ruled Myanmar, Malaysia says”(검색일: 2026. 2. 19.).

12) The Straits Times(2026), “To recognise or not? Behind ASEAN's lack of consensus on the Myanmar polls”(검색일: 2026. 2. 19.).

13) Lowy Institute(2026), “Myanmar: ASEAN's parallel diplomacy trap”(검색일: 2026. 2. 19.).

- [소극적 인정]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군부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며 이번 선거에 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선거 과정에 참여함.¹⁵⁾
- [비개입] 브루나이는 아세안 내 최소 개입 원칙을 유지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한 상태임.

2) 서방국

■ 주요 서방국은 선거 불인정 및 군부 연계 세력에 대한 제재 기조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전면적 단절 대신 제한적 관여를 남겨두는 이중적 對미얀마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미국은 이번 선거를 ‘사기 선거(Sham Election)’라고 비판하면서도 2025년 7월 군부 연계 기업인 KT Services & Logistics, MCM Group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등 정책 변화 조짐을 보임.
-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초 미얀마 사태 관련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군부에 대한 포괄적 경제 제재의 핵심 법적 기반은 계속 유지함.¹⁶⁾
 - 미국의 대미얀마 주요 경제 제재는 다국적 에너지 및 통신 기업 철수,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의 봉제업 위탁 생산 중단, 달러 결제망(SWIFT) 접근 차단 등임.
- 이는 미국이 대미얀마 경제 제재를 핵심 압박 수단으로 유지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선별적 관여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함.¹⁷⁾
- [EU] 유럽연합 인권 특별대표는 이번 선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공식 규정하여 선거 참관단 파견을 거부함.¹⁸⁾
 - 유럽연합은 2025년 4월 25일에 군 연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무기 금수 조치 등 강경 제재 기조를 2026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¹⁹⁾
- [호주] 호주는 선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s)’를 표명하며 선거 불인정 입장을 밝혔고, 일부 상원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UEC)에 대한 제재 및 사이버범죄 네트워크 타격을 촉구함.²⁰⁾
- [뉴질랜드] 뉴질랜드 의회는 2025년 12월 결의안을 통해 군부 선거를 ‘사기 선거(Sham Election)’로 규정하고 거부 입장을 공식화함.²¹⁾

14) Asia News Network(2026), “No consensus for now’ within ASEAN to recognise Myanmar elections, says group’s chair” (검색일: 2026. 2. 19.).

15)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2026), “Myanmar’s Forgotten Democratic Revolution”(검색일: 2026. 2. 26.).

16) Federal Register(2025),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and in Relation to Burma”(검색일: 2026. 2. 19.).

17) CRS(2023), “Burm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pp. 7-8.

18) Reuters(2025), “Myanmar elections unlikely to result in credible outcome, EU human rights envoy says”(검색일: 2026. 3. 5.).

1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5), “Council Decision (CFSP) 2025/820”(검색일: 2026. 3. 5.).

20)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DFAT)(2026), “Statement on Myanmar”(검색일: 2026. 2. 19.).

21) Democratic Voice of Burma(DVB)(2026), “New Zealand parliamentary resolution rejects regime’s sham 2025-26 elections”(검색일: 2026. 2. 19.).

3) 역외 주요국

- 중국과 러시아는 선거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우회하며, 군부와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해 미얀마를 서방 견제 거점으로 활용함.
 -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얀마 관련 결의 과정에서 기권(Abstention)을 행사해 강제적 제재 도입에 반대하였으며, 미얀마 사태를 ‘내정 문제’로 규정하여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에 동조하지 않음.²²⁾
 - [중국] 중국은 쿠데타 이후 희토류 공급망 확보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하는 등 경제적 협력과 함께 군부에 대한 외교 및 군사적 지원을 본격화하며 군부 붕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²³⁾
 - 미얀마는 대중국 희토류의 98%를 공급하는 핵심 공급원이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양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음.
 - [러시아] 러시아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방공 시스템 및 전투기 등의 무기 공급을 지속하며 미얀마 군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 2월에는 미얀마 군정과 다웨이(Dawei)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도 확대 중임.²⁴⁾
- 한국, 일본, 인도 등 전통적인 아시아 주요 투자국들은 이번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우려하면서도, 오랜 기간 축적해온 對미얀마 경제적·전략적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신중한 균형 외교를 추구함.
 - [한국] 한국정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한 채, 2021년 이후 이어온 국방 교류 중단 및 신규 ODA 제한 등 기존의 대미얀마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²⁵⁾
 - [일본] 일본은 이번 총선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얀마 국민 지원’을 명분으로 기존 7,396억 엔 규모의 차관 등의 공적 금융 지원은 지속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²⁶⁾
 - 일본은 병원, 상하수도, 장학금 등 미얀마 일반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인도적 인프라 사업은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일부 유지 중임.
 - [인도] 인도는 미얀마 선거와 관련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도 군부의 선거 계획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²⁷⁾

22) UN Press(2022), “Security Council Demands Immediate End to Violence in Myanmar”(검색일: 2026. 2. 25.).

23) ICG(2025), “Myanmar’s Dangerous Drift: Conflict, Elections and Looming Regional Détente,” p. 4.

24) The Straits Times(2025), “Russia signs investment deal with Myanmar, sees offshore oil and gas prospects”(검색일: 2026. 2. 19.).

25) Korea Times(2021), “Korean government suspends development cooperation in Myanmar”(검색일: 2026. 2. 19.).

26) Justice for Myanmar(2023), “Statement calling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op ODA and publicly-funded projects benefiting the Myanmar military,” p. 2.

27) The Wire(2026), “Between junta and democracy: India’s uneasy position on the Myanmar elections”(검색일: 2026. 2. 19.).

3. 쿠데타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와 신정부 출범의 경제적 함의

가. 쿠데타 이후 경제 위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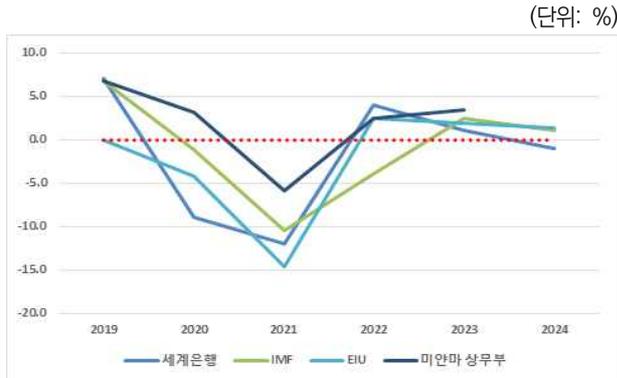
- 미얀마 경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FDI)가 급격히 위축된 데 이어, 2025년 3월 대지진과 내전 격화까지 겹치면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쿠데타 이후 국제 제재와 다국적 기업 철수의 영향으로 2021년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대폭 하락함.
 -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을 -5.9%라는 비교적 완화된 수치로 제시한 가운데, 주요 경제전망 기관인 EIU는 -14.6%, 세계은행은 -12.0%, IMF는 -10.5% 등 더 큰 폭의 역성장으로 평가함(그림 1).
 - 2022~23년 미얀마 경제는 기저효과로 일부 반등했으나, 서방 자본의 공백과 내전 등의 영향으로 세계은행은 2024년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당초 1% 전망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 특히 2025년 3월 대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자산 피해는 GDP의 약 14%인 110억 달러, 경제적 생산 손실은 GDP의 약 4%인 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세계은행은 2025/26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2.5%로 하향 조정함.²⁸⁾
 - 2026/27 회계연도 성장률은 대규모 재건 투자 수요로 인해 3%로 일부 반등하겠으나, △전력난, △노동력 부족, △무역 및 환율 규제, △지속적인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²⁹⁾
- 특히 미얀마의 GDP 세계 점유율은 동남아 신흥 4개국(CLMV) 중 유일하게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됨(그림 2).
 - 동남아 신흥 4개국(CLMV)의 경우,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의 GDP 세계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2022년을 기점으로 점진 회복 중임.
 - 반면 미얀마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빠른 속도로 GDP 세계 점유율이 늘어났으나, 2021년 쿠데타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15년 당시의 점유율을 하회하는 중임.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실질 GDP 수준이 2019년 대비 약 10% 축소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지 않은 국가로 평가됨.³⁰⁾

28) Reuters(2025), "World Bank says Myanmar economy set for growth rebound"(검색일: 2026. 2. 20.).

29)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Economic Aftershocks," p. 8,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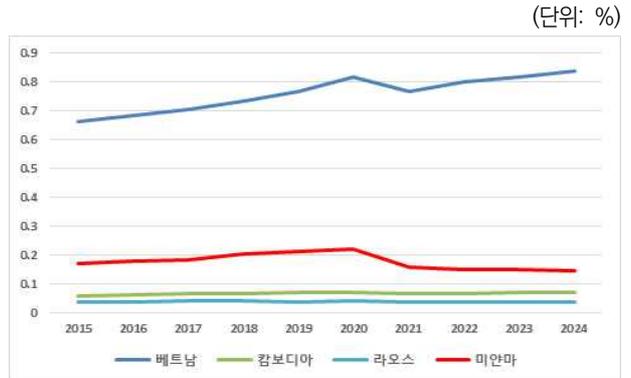
30) World Bank(2023), "Economic recovery falters as conflict and inflation weigh"(검색일: 2026. 2. 19.).

그림 1. 주요 경제기관별 미얀마 경제성장률 평가 추이 (2019~24년)



주: 미얀마 상무부 자료는 미얀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세계은행, IMF, EIU, 미얀마 상무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 동남아 신흥 4개국(CLMV)의 PPP 기준 GDP 세계 점유율 변화(2015~24년)



자료: 세계은행 GDP based on PPP, share of worl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특히 미얀마의 외화 부족 현상과 제한적 시장 통제 정책은 환율 및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부 재정 악화와 공공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찢화 가치는 쿠데타 이후 70%가량 폭락했으나, 2024년 10월부터 도입된 균정의 외환 통제로 인해 2025년 9월 기준 공식 환율은 달러당 3,248짖 수준을 유지 중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연평균 18.4%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31.7%로 정점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25.4%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표 2).
- 2025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으며, 식품과 비식품 물가상승률도 각각 31%, 30%로 나타남.³¹⁾
 - 주요 식품별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쌀 22%, 과일 및 채소 20%, 생선 16%, 닭고기 11%, 달걀 9%, 돼지고기 7%, 식용유 6% 순으로 집계됨.
- 찢화 가치 하락과 소비자물가 급등은 코로나19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부양책으로 이미 부담이 가중된 정부 재정에 추가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임.
- 공공부채 비율은 세수 감소, 국제 차관 및 원조 축소 등으로 부채 부담이 심화되면서 2020년 42.3%에서 2024년 66.2%까지 급등함.

31) The Global Economy, "Burma (Myanmar): USD Exchange Rate"(검색일: 2026. 2. 20.).

표 2. 미얀마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9~24년)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명목 GDP	십억 달러	77.8	68.1	61.8	64.5	64.3
실질 GDP 성장률	%	-1.2	-10.5	-4	2.5	1
1인당 GDP	달러	1,462	1,271	1,146	1,190	1,179
소비자물가상승률	%	5.7	3.6	18.4	27.1	25.4
재정수지/GDP	%	-6.2	-8.1	-6.5	-6.0	-5.7
수출(상품)	십억 달러	16.9	15.2	17.1	14.8	-
수입(상품)	십억 달러	18.0	14.3	17.4	16.4	-
무역수지	십억 달러	-1.0	0.8	-0.3	-1.7	-
경상수지	십억 달러	-2.7	-0.2	-2.8	-2.4	-2.5
공공부채/GDP	%	42.3	53.9	59.8	60.1	66.2
실질환율지수	(2015년=100)	61.3	66.8	65.7	56.2	60.1

주: 1) 미얀마 관련 데이터는 기관별 예측치가 상이하여 World Bank와 IMF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함.

2) 2024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Bank, CEIC, ADB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경제 회복 지연에는 자본 이탈뿐 아니라, 내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전력난, 물류 차질 등 실물 부문의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노동력 부족] 세계은행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지 직원 이직률이 2025년 4월 12%에서 10월 14%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직자의 53%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남.³²⁾
 - 조사 기업의 약 47%는 강제 징집을 피해 청년 숙련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 [전력난] 미얀마의 2025년 1~9월 야간조명(Nighttime Lights) 지수는 전년대비 2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력 공급 악화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위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³³⁾
 - 실제 발전량이 월평균 3,034MW로 설치 용량(6,880MW)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의 약 64%가 잦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하고 있음.
- [물류 차질] 내전으로 중국 및 태국과의 주요 국경 교역로가 자주 중단되는 가운데 군정부는 2025년 8월 태국과의 최대 육로 교역로인 미야와디-매솿(Myawaddy-Mae Sot) 국경을 전격 폐쇄해 대외 물류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음.³⁴⁾
 - 2025년 8월에 85개 타운십을 대상으로 시행된 ISP-Myanmar의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수입품 부족을 경험했으며 92%의 가구가 물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미얀마 경제는 국경 무역과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제재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으나, 건설 및 제조업 등 내수 기반 산업은 지속 위축되고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나타남.

32)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Surviving, Not Thriving," p. 14.

33) *Ibid.*, p. 13.

34) ISP(2025), "ISP-Myanmar's Annual Strategic Review and Foresight 2025-2026," p. 15.

- **[농업]** 2024년 기준 농업은 생산비 상승과 수입 사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잿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중국 및 태국과의 무역 일부 재개로 쌀, 옥수수, 수산물 수출이 일정 부분 증가함.³⁵⁾
 - 미얀마의 2024년 농업 생산비는 2020년 대비 약 40% 상승했으며 국제 제재와 내전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출이 차질을 빚었으나, 쌀, 옥수수, 콩류, 수산물 수출이 회복되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 **[건설업]** 건설업은 2021년 쿠데타 이후 FDI 급감과 함께 △자재비 상승, △노동력 부족, △공급망 차질, △내전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실질 기준 -1.4%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³⁶⁾
- **[제조업]** 제조업은 2025년 내내 PMI(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0 이하의 수축 국면을 반복하고, 정전으로 인한 매출 손실과 원자재 및 노동력 부족,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생산과 고용 모두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³⁷⁾
- **[광업]** 광업은 미얀마 공식 통계상으로는 대형 주석 광산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희토류 등 비공식 채굴이 급증하는 추세임.
- 미얀마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광업이 미얀마 전체 GDP의 약 1%를 차지해왔으나, 2021년 기준 0.8%로 하락한 후 2022년 0.5%, 2023년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³⁸⁾
 - 미얀마는 천연가스 수출국이나 쿠데타 이후 가스전의 주요 운영기업인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주요 가스전 운영이 중단되어 생산량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군정부는 2021년 광업 부문 성장률을 전년대비 -29.7%, 2022년 -26.5%, 2023년 -3.3%로 밝히며, 여전히 쿠데타 이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함.³⁹⁾
 - 미얀마 주석(Tin)은 중국 주석 수입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 8월 미얀마 최대 주석광산 (Man Maw Mine) 운영 중단으로 인해 주석 공급이 급감함.
- 다만 세계은행 보고서는 희토류 수출이 미얀마 공식 통계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중국 세관 데이터상 수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힘.⁴⁰⁾
 - 2017~25년 11월까지 미얀마는 중국의 최대 희토류 수입국으로 약 32만 톤 이상을 수출했으며, 이 중 86%인 42억 달러가 쿠데타 이후 시기인 2021~25년 사이에 집중됨.⁴¹⁾
- 2021~25년 미얀마에 유입된 FDI 총액은 74억 달러로 쿠데타 이전 대비 74% 감소한 수준이며, 이 중 중국 자본이 47%를 차지함.⁴²⁾
 -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2021년 5월 승인된 25억 달러 규모의 미린지앙(Mee Lin Gyaing) LNG 발전소 프로젝트, 일대일로(BRI) 핵심 사업인 차우피우(Kyaukphyu) 심해항 개발 및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중 희토류 등 핵심광물 채굴 사업 등이 있음.

35)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Surviving, Not Thriving," pp. 29-31.

36) GlobeNewswire(2026), "Myanmar Construction Industry Report 2025"(검색일: 2026. 2. 25.).

37)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Economic Aftershocks," pp. 4-5.

38)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2023), "ch.8 National Accounts," p. 285.

39) *Ibid.*, p. 284.

40)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Surviving, Not Thriving," p. 20.

41) ISP(2026), "ISP-Myanmar's Annual Strategic Review and Foresight 2025-2026," p. 8.

42) *Ibid.*

나. 신정부 출범 전망과 경제적 함의

- 향후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신정부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대통령직 외부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1인 지배 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는 헌법상 대통령과 군 최고사령관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직에 취임할 경우 군 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구조적 변수가 존재함.
 - 이에 군정부는 2026년 2월 3일 국가방위안전보장위원회(NDSC) 명의로 국가자문위원회법(Union Consultative Council Law, NDSC 법률 제3호)을 제정함.⁴³⁾
 - 동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안보, △외교, △입법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민 아웅 흘라잉이 직접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더라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신정부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으로 해석됨.⁴⁴⁾
- [정치] 총선 이후 출범할 신정부는 ‘명목상 민간정부(Nominally Civilian Government)’의 형태를 띠며, 군부가 정치 및 군사의 실권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 출범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실용적 협력을 재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⁴⁵⁾
 - 국제위기그룹(ICG)은 중국이 현 군정보다 ‘명목상 민간정부’를 상대하기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미얀마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지역 내 외교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함.⁴⁶⁾
 - 동시에 신정부 출범은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의 1인 지배 체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⁴⁷⁾
 -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2011년 최고사령관 취임 이래 군부 세대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선거를 앞두고 핵심 고위 장성들을 대거 은퇴시키거나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젊은 4세대 장성들로 지휘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군부 내 잠재적 도전 세력을 사전에 차단함.
- [외교] 아세안 주요국과 인접국들은 미얀마의 안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정부에 대해 비판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로 외교 기조를 선화할 것으로 예상됨.

43) CJ Platform(2026), “Junta Leader Enacts ‘Union Advisory Council Law’ in Move Seen as Imitating NLD’s State Counsellor Post”(검색일: 2026. 3. 1.).

44) EU SEE/Hivos(2026), “Junta enact law to form extra-constitutional Consultative Council for cementing military control”(검색일: 2026. 3. 1.).

45) ICG(2025), “Myanmar’s Dangerous Drift: Conflict, Elections and Looming Regional Détente.” pp. 12-14.

46) *Ibid.*, pp. 10-12.

47) Naing Min Khant(2025), “Beyond Ballots: The Junta Chief’s Elite Management Strategy Ahead of Myanmar’s Elections”(검색일: 2026. 3. 1.).

- 중국과 인도는 국경 지대의 안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미얀마 군정의 통제력 상실 및 국가 붕괴를 강하게 우려하며 군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⁴⁸⁾
- 태국과 방글라데시 등 접경국 또한 난민 유입과 국경 무역 차질을 우려해, 2025년 4월 방콕 BIMST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군부 수장과의 대면 외교를 재개함.⁴⁹⁾
-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말레이시아는 대지진 구호를 명분으로 외교장관을 네피도에 파견하는 등 회원국들의 군부 접촉이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군부 고립 정책인 5개국 합의(5PC)가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함.⁵⁰⁾
- 이에 따라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아세안 주요국 및 인접국은 선거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2026년 4월 출범할 신정부를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며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⁵¹⁾

■ [경제] 신정부 출범 및 재건 사업 추진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력, △전력, △물류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은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GDP의 약 1.8%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 부양책과 선거 관련 지출, 국경 무역의 부분적 재개에 힘입어 미얀마 경제가 2025/26년 -2.0% 역성장에서 2026/27년 3.0%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⁵²⁾
- 그러나 이러한 반등은 기저효과에 불과하며, 경제 규모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3% 축소된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강제 징집에 따른 극심한 구인난, 만성적 전력 부족, 내전에 따른 물류비용 급등이 신정부하에서도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됨.⁵³⁾
 - 특히 기업 운영비의 급증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 심리가 저조해, 2026/27 회계연도에 제재가 일부 완화된다 하더라도 경제는 현상 유지 수준의 저성장 고착화(L자형) 국면에 접어들 것임.⁵⁴⁾
- 현 군정이 선거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온 결과, 2026/27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신정부의 거시경제 핵심 리스크로 지적됨.⁵⁵⁾
 - 대외 차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과도한 통화 팽창에 따른 19%대의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 구매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됨.⁵⁶⁾

■ 결과적으로 미얀마 신정부 출범은 대외관계 정상화와 경제 재건을 위한 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대내적 권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48) ICG(2025), "Myanmar's Dangerous Drift: Conflict, Elections and Looming Regional Détente," pp. 15-16.

49) *Ibid.*, pp. 15-16.

50) *Ibid.*, p. 8.

51) *Ibid.*, p. 10.

52)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Surviving, Not Thriving," p. 42.

53) *Ibid.*, pp. 15-16.

54) *Ibid.*, p. 9.

55) *Ibid.*, p. 40.

56) *Ibid.*, pp. 41-43.

- 대내적으로는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이 국가자문위원회(UCC) 신설과 군부 세대교체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한 만큼, 신정부는 외양상 민간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인 군부 통제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의 실용주의적 관여 확대로 미얀마의 외교적 고립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야당이 배제된 선거 결과로 신정부의 정당성이 제한적인 만큼 서방의 제재가 단기간 내 전면 완화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경 무역 재개와 재건 투자 유입 등 일부 경제 회복 동력이 형성될 수 있으나, 쿠데타 이후 누적된 Δ GDP 수축, Δ 상시적 전력난, Δ 물류 붕괴, Δ 분쟁 경제의 구조화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해소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정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의 공적 경제협력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민간 부문 연계는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한-미얀마 교역액은 수출 3억 2,521만 달러, 수입 5억 6,015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은 2021년 쿠데타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⁵⁷⁾
- 한국정부는 유·무상원조 등 공적 경제 협력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인도적 지원 및 민간 투자 기반은 부분적으로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됨.⁵⁸⁾
 - 정부는 공적 원조 중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부터 분쟁 피해 실항민을 대상으로 400만 달러 규모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⁵⁹⁾
 - 한국기업의 대미얀마 누적 투자액은 2024년 12월 기준 79억 달러 규모이며, 주요 투자 분야인 봉제업 내 가동 중인 한국계 봉제 공장은 약 120개로 추정됨.
 - 또한 한국은 E-9 고용허가제를 통해 2024년 기준 약 29,825명의 미얀마 국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한국 내 5위 규모의 인력 송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⁶⁰⁾

■ 서방 제재가 단기간 내 해제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한국은 신정부 출범을 즉각적인 경제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방 제재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요 조건으로 삼고 있어 신정부 출범만으로 즉각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재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전력 불안정, 물류 차질 등 구조적 장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7)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Surviving, Not Thriving," pp. 41-43.

58) KOTRA(2023), 「2025 해외출장 가이드」, pp. 21~26.

59) UN Myanmar(2024), "KOICA partners with UN agencies in Myanmar to support voluntary return and settlement by displaced people"(검색일: 2026. 2. 25.).

60) STEP UP(2024), 「E-9 근로자 현황」(검색일: 2026. 2. 24.).

- 이에 따라, 당분간 전면적인 재관여보다는 ① **현지 민간 채널 보존**, ② **재한 미얀마인 네트워크 관리**, ③ **국제기구 경유 인도적 지원**, ④ **정세 모니터링을 통한 재진입 역량 유지** 등 기존 협력 기반의 전략적 관리에 주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지 민간 채널 보존]** 쿠데타 이후 운영을 축소한 현지 진출 기업의 사업 기반이 단절되지 않도록, 미얀마 투자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기반조사와 재진입 사업모델 발굴 지원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KOICA-KOTRA의 'K-상생 이니셔티브' 협업 등의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정세 안정 시 민간 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돕는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음.
- **[재한 미얀마인 네트워크 관리]**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은 현지 정세 파악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 관계 정상화 시 귀중한 소프트파워 자산이 될 수 있음.
 - 특히 E-9 비자 근로자 및 유학생 네트워크와의 교류 유지는 민간 차원의 양국 간 신뢰를 보존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지속]** 양자 차원의 공적 개발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국제기구를 경유한 인도적 지원은 향후 양국 간 협력 재개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24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KOICA와 유엔 기구(UNHCR, UNFPA) 간 카친주 실향민 지원사업(400만 달러 규모) 등은 다자 채널을 활용한 효과적인 우회 지원 사례로 볼 수 있음.
- **[재진입 역량 유지]** 전면적 협력 재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향후 정세 변화에 타국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한-미얀마 양자투자보장협정(BIT)의 효력을 유지하고 KOTRA 양곤 무역관을 통한 현지 정보 수집망을 존속시킴으로써 향후 제재 완화 국면에서 재진입 역량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KIEP**